

‘10~’1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

2010. 9. 2(목)

기 획 재 정 부

본 보고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초안으로서 '11년도 예산안
확정 과정에서 구체적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목 차

I.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	1
II. 대내외 경제여건	4
III. 재정운용여건	6
IV. '10~'14년 재정운용방향	9
V. 분야별 재정투자방향	14
〈 참고1 〉 2011년도 예산안 편성방향	27
〈 참고2 〉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및 공개토론회	28
〈 별첨 〉 공개토론회 분야별 주제발표 주요내용 [요약]	29

I.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

1.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

□ 단년도 예산편성 시계를 넘어 국가의 정책방향과 중장기 재정 전망을 반영하여 중기적 시각에서 자원배분방향 및 전략 수립

○ 국가재정운용계획은 5회계연도 단위로 '04년부터 수립되었으며, '07년부터 국회에 제출

□ '10년부터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'10.5월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반영

* 계획 수립방향 사전보고, 전년도계획 평가·분석보고서 제출 등

※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절차

□ (사전 준비) '09년말 '10~'1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

○ 각 부처는 부처별 중기사업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('10.1월)

□ (계획안 마련) 재정전략회의,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방향 논의

○ 전 국무위원이 참석한 재정전략회의에서 '10~'14년 재정운용 전략, 지출생산성제고 방안 등 토론('10.5월)

○ 민·관전문가 참여 분야별 공개토론회 개최(14개 분야, '10.6월)

*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복지, 일자리, R&D 등 주요분야에 대해 추가적 공개토론회 개최(8.31일)

□ (향후계획) '11년 예산안 편성내용 및 '10년 세제개편안 내용 등을 반영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, 국회 제출 계획(10.2일)

2. '09~'13 계획에 대한 평가

□ (재정운용방향) 경기상황에 대응한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와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 방향을 제시

○ 단기적으로 경기회복에 적극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운용

- 경기회복 추이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 하되, 미래대비 투자 및 서민생활안정 지원에 중점 투자

○ 위기 대응 과정에서 다소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

- 재정수지 균형은 가급적 조기에 회복('13~'14년 균형)

-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%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, '13년에 30%대 중반 수준 유지

'09~'13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주요 재정총량

	'09		'10*	'11	'12	'13
	당초	추경				
실질성장률(%)	4.0	△2.0	4.0	5.0	5.0	5.0
재정수입(조원)	291.0	279.8	287.8	309.5	337.6	361.7
• 국세수입(조원)	175.4	164.0	168.6	182.1	199.8	219.5
조세부담률(%)	21.6	20.5	20.1	20.1	20.4	20.8
재정지출(조원)	284.5	301.8	291.8	306.6	322.0	335.3
재정수지(조원)	△24.8	△51.0	△32.0	△27.5	△16.1	△6.2
(GDP 대비, %)	(△2.4)	(△5.0)	(△2.9)	(△2.3)	(△1.3)	(△0.5)
국가채무(조원)	349.7	366.0	407.1	446.7	474.7	493.4
(GDP 대비, %)	(34.1)	(35.6)	(36.9)	(37.6)	(37.2)	(35.9)

* '10년 정부안 기준(국회확정치는 성장률 5.0%, 수입 291.0조원, 지출 292.8조원)

□ (환경변화)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으로 세입여건이 개선되었으나, 성장동력 확충·친서민 지원 등 지출소요도 증가

○ 내수·수출의 동반호조로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세가 지속되어 '09년 (+) 성장을 실현하고 '10년 성장을 전망도 개선

- 그러나,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서민의 체감경기 개선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

○ 그리스 등 일부 남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재정위기에 직면하고, 미국, 영국 등 주요 선진국 재정건전성도 크게 악화

- 각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재정건전화 규모와 속도에 대한 입장이 상이

○ 다른 나라보다 재정여건이 양호하나, 저출산·고령화, 장기적으로 통일비용 등 재정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필요성 지속 제기

□ (향후과제)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성장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재정관리 목표와 전략을 제시할 필요

○ 세입여건 개선과 재정지출 증가요인을 고려하여 재정건전화 목표와 전략을 점검, 보완

○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미래대비 투자 확대

○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

○ 재정건전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,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노력을 강화할 필요

⇒ '09~'13 계획 수립 이후 환경변화 및 이에 따른 점검·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'10~'1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추진

Ⅱ. 대내외 경제여건

1. 세계경제 전망

- (2010년)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이나, 국제 금융시장 및 주요국 경기 등 불안요인이 상존
 - 최근 미국·중국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둔화되는 조짐이 있으나, 개도국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이어질 전망
 - 다만, 주요국의 경기회복 지연,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, 국제 원자재가격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
- (2011년 이후) '11년의 경우 위기이후 반등효과가 사라지면서 금년보다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4%대의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
 - 선진국은 2%대 중반의 성장세가 예상되며, 유럽이 미국·일본보다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
 - 개도국의 경우, 중국·인도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6%대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세계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전망
 - '12년이후 세계경제는 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4%대의 성장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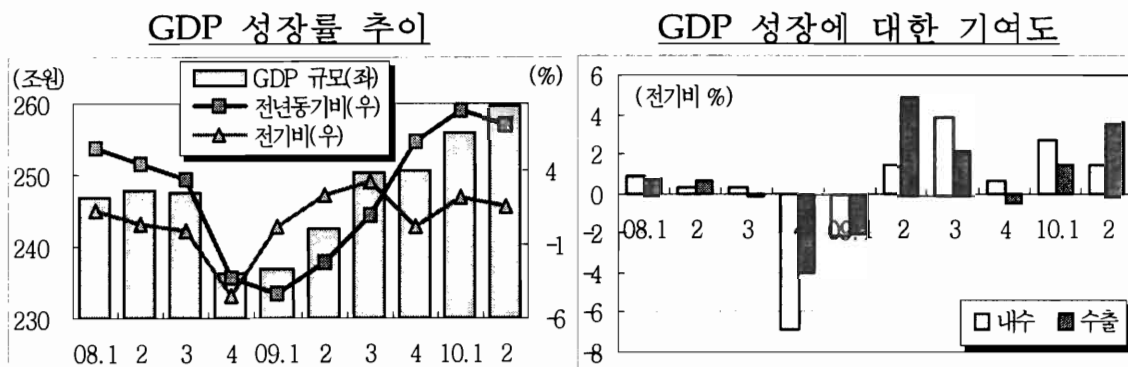
세계경제 성장률 전망('10.7월 IMF, %)

	'09년	'10년	'11년	'12년	'13년	'14년
세 계	△0.6	4.6	4.3	4.5	4.5	4.6
- 선진국	△3.2	2.6	2.4	2.4	2.4	2.4
- 개도국	2.5	6.8	6.4	6.6	6.6	6.7

2. 국내경제 전망

□ (2010년) 내수·수출의 동반호조로 경기개선 흐름이 이어지면서, 상반기에 전년대비 7.6% 성장

- 수출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, 민간소비·설비투자가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내수가 성장에 큰 폭 기여



- 정부부문의 성장기여도가 줄어드는 가운데 민간부문 회복의 자생력이 강화되는 모습

* 성장기여도(전년동기비, %p)

- 정부부문: (09.1/4) 1.9 (2/4) 1.9 (3/4) 1.5 (4/4) 0.8 (10.1/4) 0.8

- 민간부문: (09.1/4) △6.2 (2/4) △4.1 (3/4) △0.5 (4/4) 5.2 (10.1/4) 7.3

-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전망한 금년도 연간 5.8% 성장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

□ (2011년 이후) 대내외 불확실성이 있으나, '11년 이후 5% 내외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

-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 수출 수요가 유지되는 가운데, 금융시장 안정, 고용·소득회복 등에 힘입어 내수도 견조한 증가 예상
- 다만, 위기이후 세계경제 성장둔화 소지, 인구고령화 영향 등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가능성 상존

Ⅲ. 재정운용여건

1. 재정수입

[1] 국세수입

□ 성장률 제고 및 소득세·법인세 세율인하 유예로 인해 '09~'13 계획보다 국세수입 증가 예상

○ '10년 성장률 전망 개선(5.0→5.8%)으로 '09~'13 계획에 비해 국세수입이 증가할 전망

○ 다만, 소득세·법인세 세율인하 효과*가 나타나는 '12년 이후에는 '09~'13 계획 대비 증가폭이 점차 축소될 전망

* ('12) △1.4조원 ('13) △2.3조원

□ 그러나 세계경제 둔화 등 대외변수의 영향으로 기업실적 및 민간소비가 위축될 경우 국세수입 하락 가능성

○ 유럽재정위기 장기화, 환율변동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,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 불확실성 상존

[2] 세외수입

□ 경기회복 추세 및 수입 증대노력 등에 따라 국유재산 임대·매각수입, 범칙금 수입 등을 중심으로 세외수입 증가 전망

○ 다만,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공공기관 지분매각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 상존

2. 재정지출 여건

- 의무 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, 성장동력 확충 및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출요구도 증가
 - 지방교부세, 국채이자, 공적연금, 건강보험 등 법적·의무적 지출 확대 전망
 - 경기 회복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부세가 늘어나고, 국가채무 확대에 따른 이자지출 소요도 증가할 전망
 -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미래 대비 투자소요 확대
 - 첨단융합, 지식기반, 녹색기술 분야 등에서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
 -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 지원 요구도 지속

<'11년도 총지출 부처요구 규모>

◇ '09~'13 계획('11년 306.6조원) 대비 **+6.3조원이 초과된 312.9조원**

- 의무지출, 국책과제 등에 대한 증액 요구 집중

주요 분야별 '11년 예산요구 현황(조원, %)

	R&D	복지·노동	국방	일반공공행정	총지출
◇ '10 예산	13.7	81.2	29.6	48.7	292.8
◇ '11 요구(A)	15.2	87.3	31.6	53.4	312.9
(전년대비 증가율)	(10.8)	(7.4)	(6.9)	(9.7)	(6.9)
◇ '09~'13계획(B)	14.9	85.3	30.9	52.7	306.6
차 이(A-B)	0.3	2.0	0.7	0.7	6.3

3.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

□ (재정수지) 세입여건은 개선되었으나, 지출소요도 함께 증가

- 성장률 개선에 따른 세입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재정수지는 당초 계획보다 개선 전망

* '09년 재정수지(GDP대비, %) : ('09~'13계획) $\Delta 5.0\%$ $\rightarrow$ (결산) $\Delta 4.1\%$

- 다만, 의무지출 및 서민생활 지원 등 지출 소요도 확대되고 있어 '13~'14년 균형재정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에 중점을 둘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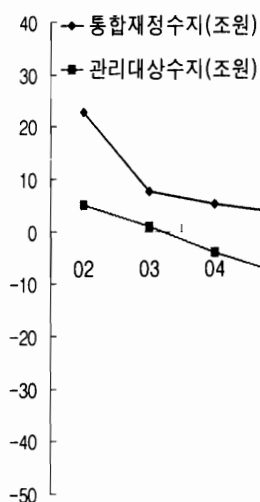
□ (국가채무) '09년 결산 결과 국가채무 수준이 당초 전망보다 낮아져 중기적으로 국가채무 관리 목표 개선 예상

- '09년 결산 결과 국가채무는 GDP 대비 33.8%로 '09년 추정 예산 편성 당시 계획(35.6%) 보다 1.8%p 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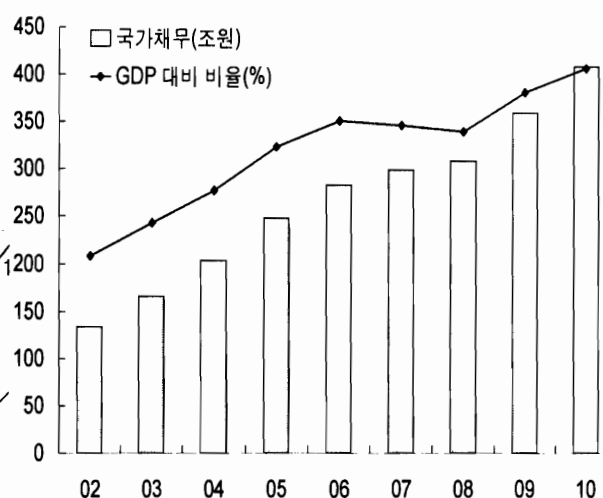
- 이에 따라 '09~'13 계획에서 제시한 국가채무 30%대 중반 수준 관리목표 달성여건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

- 다만, 중장기 재정위험 등으로 인한 미래 국가채무의 증가 가능성에 대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

재정수지 현황



국가채무 현황



IV. '10~'14 재정운용방향

1. 중기 재정운용기조

- ◇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대비 투자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지출소요를 차질없이 지원하면서도
- ◇ 재정건전성 회복노력을 지속

①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대비 투자 확대 및 서민생활 안정 지원

- 녹색성장, 고용, 중소기업, 교육 등 우리경제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분야를 적극 지원
- 서민·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서민 생활 안정 지원

⇒ 전략적 재원배분 및 핵심 국책과제 중점 지원

② 재정건전성 회복

- 경기 회복세, 저출산·고령화 등 중장기 재정위험 등을 고려하여 재정건전성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
 - (재정수지) 당초 계획대로 '13~'14년 균형재정 달성
 - (국가채무) 당초 30%대 중반 관리목표를 30%대 중반 이내로 개선

⇒ 재정 관리체계 개선, 지출 생산성 제고, 세입기반 확대 등 재정건전화 노력 강화

2. 중기재정운용 모습

[1] 재정수입

□ 예산과 기금 수입을 합한 **재정수입**은 계획기간중 연평균 7%대 수준 증가할 전망

- 예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**국세수입**은 경상성장을 전망치(7.6%) 보다 1~2%p 높은 9% 내외 수준 증가 예상

중기 재정수입 전망 (조원, %)

	'10년*	'11년	'12년	'13년	'14년	연평균 증가율
▣ 재정수입	290.8	310~316	335~345	360~370	385~395	7%대
○ 예산 수입	194.8	208~213	228~236	247~255	267~275	8%대
▪ 국세 수입	170.5	185~188	200~205	220~225	240~245	9% 내외
○ 기금 수입	96.0	102~103	107~109	113~115	118~120	5%대

* '10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

[2] 재정지출

□ '13~'14년 균형재정 목표달성을 위해 **재정지출** 증가율은 재정 수입 증가율(7%대) 보다 2~3%p 낮은 수준으로 관리

- 계획기간중 **예산지출** 및 **기금지출** 증가율은 연평균 4~5% 수준으로 관리

중기 재정지출 계획 (조원, %)

	'10년*	'11년	'12년	'13년	'14년	연평균 증가율
▣ 재정지출	292.8	306~311	321~326	335~340	350~355	4~5%
○ 예산 지출	205.3	214~218	225~228	234~237	245~248	4~5%
○ 기금 지출	87.5	92~93	96~98	101~103	105~107	4~5%

* '10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

[3]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

- (재정수지) '13~'14년 균형재정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
 -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의 경우 '14년에 흑자 전환이 가능할 전망
- (국가채무) '09~'13 계획보다 국가채무 관리목표 개선
 - '09결산 및 '10년 성장률 전망 개선 등의 효과로 국가채무는 '09~'13 계획에 비해 개선 전망
 - 이에 따라 '14년 국가채무는 GDP 대비 30%대 중반 이내 예상
- (조세부담률) 지방세 규모 대폭 감소에 따라 조세부담률은 '10~'14년간 19%대를 유지할 전망
 - 다만, 세입확대 노력 등을 통해 매년 조세부담률이 완만하게 증가하여 '14년에는 20%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

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

	'10년*	'11년	'12년	'13년	'14년
■ 관리대상수지 (GDP대비, %)	△27	△2~△23	△1~△2	△1 이내	흑자전환
■ 국가채무 (GDP대비, %)	36.1	35~37	30%대 중반	30%대 중반	30%대 중반 이내
■ 조세부담률 (%)	19.3	19%초반	19%중반	19%중반	19%후반

* '10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

3. 재정건전화 방안

① 세입기반 확충

○ 비과세·감면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

- 지원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조세원칙·국제기준에 배치되는 제도는 최대한 정비하고 신규감면도 억제
- 서민중산층,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최대한 유지

○ 과세 정상화 대책을 지속 추진하는 등 세원투명성 제고

- 수입금액 5억원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검증제도 도입
-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확대,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율 인상 등 과표양성화 유도

② 지출생산성 제고

- 예산을 아껴 쓰면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재정지출 생산성 제고노력 추진

◇ 재량지출 구조조정

- 성과 미흡사업은 원칙적으로 10% 이상 삭감
- 유사·중복사업은 과감한 통합·정비를 지속 추진
- 위기극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지원한 한시사업은 그 효과 및 필요성 등을 재점검하여 구조조정

◇ 사업 단계별 지출 효율화

- 기획-편성-집행-평가 등 사업추진 쏙단계에 걸쳐 지출 효율화 10대 원칙 준수

기획 · 요구	① 예비타당성 조사, 타당성 재조사 등 사전 타당성 검증 강화 ② 지자체·민간과 역할분담 등 재정지원 필요성 점검 ③ 대규모 재정소요에 대한 사전협의 내실화 ④ 장비·시설 도입시 인건비 등 총비용 관점에서 타당성 검토
편성	⑤ 국책과제 중심의 전략적 재원배분 ⑥ 신규 의무지출에 대한 재원마련 의무화 (Paygo원칙) ⑦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일몰제 시행
집행 · 평가	⑧ 부정·중복수급 방지 등 재정전달체계 개선 ⑨ 연계사업간 패키지화 등 사업간 네트워킹 강화 ⑩ 성과평가, 외부지적 등 성과정보의 적극적 활용

③ 재정관리체계 개선

- 재정수지 등 **재정총량**에 일정한 **관리 목표**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
- 부처가 재정수반 법률안 및 중장기 계획 추진시 **재정당국과 사전 협의절차 내실화** 등 협의·조정 기능 강화
 - * 연간 500억원 이상 또는 총지출 2,000억원 이상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은 기획재정부 협의 후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에 상정
- 장기 재정전망 실시 등 **재정건전성 관리시스템** 개선
 - 장기 재정전망을 통해 재정위험 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강구
 -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통계 재정비
 - * '11 회계연도 결산부터 발생주의를 적용하는 등 IMF GFS '01 기준 적용

V. 분야별 재정투자방향

1. 자원배분의 중점

- ☐ 녹색성장 등 세계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여 경제체질 개선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
 - 창조적 R&D 지원, 전문인력 양성, 기술혁신형 중소·중견기업 육성 등을 통해 중장기 국가경쟁력 강화
 -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고 문화콘텐츠·환경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성장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
- ☐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도모
 - 민간부문의 고용창출기반을 확충하고, 취업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
 -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·주거·의료 지원을 보완하고 저소득층의 자립·자활을 통한 탈수급 촉진
- ☐ G-20·핵안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글로벌 역량 강화 및 국격 제고
 - 공적개발 원조 등 국제기여를 확충하고, 한국형 지원모델 정립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
 - 국방투자를 효율화하고 국민의 안전 보호 관리체계 확립

2. 분야별 투자방향

① R&D 분야

□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정부 R&D 투자 지속 확대

○ 세제지원* 등을 통해 민간 R&D 투자도 적극 유도

* (예시)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R&D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

□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 뒷받침

○ 미래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 창의적 R&D위주의 기초·원천 연구 투자비중* 확대

* 기초·원천연구(%) : ('10) 43.5 → ('12) 50

○ 기후변화 대응 녹색기술, 첨단 융복합 기술 등 미래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 R&D 중점 지원

○ 원전·고속철 등 수출 경쟁력있는 산업과 중소기업·SW 등 고용창출효과가 큰 산업에 대한 R&D 지원을 전략적으로 확대

□ R&D 투자 확대와 함께 효율성 제고노력 지속 추진

○ 유사·중복사업 정비, 기초·원천연구 실용화 촉진 등을 통해 R&D 투자성과 제고

○ 출연연구기관 운영 효율화, 연구비 집행관리 강화 등 R&D 시스템 혁신 지속 추진

② 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 분야

□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신성장동력 및 녹색성장 분야 중점 투자

- 잠재시장 규모가 크고, 시장선점이 가능한 지능형 로봇, 그린카, 바이오·의료기기 분야 등에 대한 투자 확대
- 신재생에너지·원자력 등 친환경에너지 기술 개발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강화

* 신재생에너지 보급률(%) : ('10) 2.8 → ('11) 3.0 → ('14) 4.0

□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 원전, 플랜트 등 차세대 수출산업과 '+30억 신흥시장' 개척 지원

- 원자력 융합 및 플랜트 원천기술 개발,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등 유망 산업의 수출 산업화 지원

* 원전 수출목표(억불) : ('10) 300(6기) → ('11) 400(8기) → ('14) 800(16기)

- 무역보험공사, kotra 등을 통해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수주 및 중국 등 신흥시장 진출 지원

□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능력 제고와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

- 대학·연구기관의 신기술 창업 활성화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으로 청년 창업 확대

* 1인 창조기업수(만개) : ('10) 21.2 → ('11) 22.3 → ('14) 25.7

- 창업 및 성장 초기단계의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

* 창업기업 신용보증(조원) : ('10) 13.4 → ('11) 15.0 → ('14) 18.0

- 융복합기술, 녹색기술 등 미래 선도분야에서의 중소기업 기술 개발 중점 지원

③ SOC 분야

□ 저탄소 녹색성장 뒷받침을 위해 철도·수자원 투자에 중점

- 그간 중점투자가 이루어진 도로부문 대신 CO₂ 배출이 적은 철도에 대한 투자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

- 도로는 신설·확장보다 기존도로의 용량보강(선형개량 등) 중심으로 지원

* 도로개량비율(도로개량누적/도로개량대상, %) : ('10) 78 → ('11) 82 → ('14) 93

- 철도는 국가기간망 구축을 위해 고속철도 적기완공에 역점

* 경부·호남 고속철도 연장(km) : ('10) 374 → ('14) 600

- 미래대비 물 확보, 홍수 등 재해 대비, 수질 개선 등을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차질없이 지원

□ 기업의 생산·물류 기반시설 확충

-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단 진입도로 적기완공 지원

* 산단진입도로 연장(km) : ('10) 261 → ('11) 307 → ('14) 423

- 항만물류기업 지원을 위한 배후부지·기반시설 조성

* 항만하역능력(억톤) : ('10) 8.4 → ('11) 8.8 → ('14) 10.2

□ 국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발전 사업 지속 지원

- 지역 성장거점으로서 혁신·기업도시를 건설

- 지방 경제발전을 견인할 30대 선도프로젝트 투자

④ 농림·수산·식품 분야

□ 농어업을 고품질·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

- 종자산업 육성*, 농식품 기술개발 등을 통해 농어업의 신성장 산업화 지원

* 종자 수출액(억불) : ('10) 0.3 → ('11) 0.4 → ('14) 0.8

-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비, 취약분야의 경쟁력 강화 지원
-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, 한식 세계화 지원 등을 통해 식품산업*의 국제경쟁력 제고

* 농수산물식품 수출액(억불) : ('10) 64 → ('11) 80 → ('14) 132

□ 지속가능한 농림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

- 저수지 독 높임, 새만금 내부개발 등을 통한 친환경 녹색농업 유도
- 바다목장·바다숲 조성, 건강종묘 방류, 어장환경 개선 등 수산 자원 관리 강화
- 숲가꾸기·조림 등을 통한 경제림 육성 및 산림바이오매스 등 부산물의 효율적 활용 지원

□ 농어민 복지 증진 및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

- 농지연금* 도입, 농어민 연금·건강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농어민 생계 부담 완화

* 농지연금 가입가구(호) : ('11) 500(신규) → ('14) 2,000

⑤ 보건·복지·노동 분야

☐ 일을 통한 능동적 복지 및 맞춤형 지원 강화

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탈수급* 추진을 지원하고, 노인·장애인 일자리 제공 확대

* 자활성공률(취·창업자/자활근로참여자) 목표 (%) : ('10) 17 → ('11) 18 → ('14) 21

- 보육부담 경감, 장애인 의료 및 무주택자 주거 지원 등 서민·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충

* 육아서비스 수혜율 (%) : ('10) 44.1 → ('11) 46.6 → ('14) 52.6

* 보금자리주택(만호, 누적) : ('10) 31 → ('11) 52 → ('14) 103

☐ 청년층 고용여건 개선 및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 강화

-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청년층 선호 일자리를 창출하고, 졸업 후 즉시 취업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취업교육도 강화
- 취업 취약계층에게 훈련-단기일자리-취업알선을 연계 지원하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* 확대

*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취업률 (%) : ('10) 55 → ('11) 60 → ('14) 70

☐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기반 마련

- 의료 취약지 해소, 지방병원 기능 보강 등 필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
-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차질없이 지원하고, 신약 및 고급 의료기술 개발*을 위한 전략적 R&D 투자 확대

* 신약개발(건) : ('10) 19 → ('11) 21 → ('14) 25

☐ 공적연금 및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출 효율화 및 수입확충 노력 지속 추진

⑥ 교육 분야

□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우수인재 양성 중점 지원

- 대학 교육역량을 강화하여 학부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해외 석학 유치 등을 통해 **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**

* 세계 200위권 대학(개) : ('10) 4 → ('11) 5 → ('14) 8

-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성적 우수자에 대한 **장학금** 지원을 확대하고 **든든학자금 제도 정착**을 적극 뒷받침

- 선진형 대입전형 정착을 위해 **입학사정관제 도입**을 지속 지원

*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선발학생(천명) : ('10) 38 → ('11) 40 → ('14) 46

□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초·중고 공교육 경쟁력 제고

- 방과후학교* 확대,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확충 등을 통해 **공교육 내실화 도모**

* 방과후학교 지원학생(만명) : ('10) 39 → ('11) 42 → ('14) 49

-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지원, 저소득층 유치원비·학교급식비* 보조 등 취약계층에 대한 **교육복지 지속 확충**

* 급식비 지원학생(만명) : ('10) 168 → ('11) 181 → ('14) 197

□ 평생·직업교육 활성화를 통해 생애주기 능력 개발 적극 지원

- 성인의 고등교육 수요 충족 및 평생학습 참여 확산을 위해 평생학습 중심대학 및 선도대학 육성

* 평생학습 참여율(%) : ('10) 29 → ('11) 32 → ('14) 38

- 산업수요 맞춤형 대학교육 강화, 마이스터고 활성화 등을 적극 지원하여 **교육과 노동시장간 수급 불일치 완화**

⑦ 문화·체육·관광 분야

□ 온 국민이 쉽게 누릴 수 있는 문화향유 기반 확대

- 품격있는 국가상징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, 현대미술관 서울관 등 **국책사업** 지속 추진
- 생활권내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**소외지역·계층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**

□ 문화콘텐츠 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

- 차세대 콘텐츠산업의 인력·인프라·R&D 투자 지속 확대
* 문화 콘텐츠산업 매출액(조원) : ('10) 74 → ('11) 80 → ('14) 102
- 콘텐츠 저작권보호 강화 등 유통시장 선진화 병행 추진

□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 등을 통해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

- **MICE***, 생태관광 등 융복합형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
* 외래관광객수(만명) : ('10) 860 → ('11) 940 → ('14) 1,200
* MICE(Meetings, Incentives, Conventions, Exhibitions)
- 문화·역사·생태 등 지역특색에 맞는 **新관광자원 개발**

□ 생활체육 활성화와 함께 전문체육 경쟁력 강화 지원

- 생활체육 시설·프로그램 확충을 통해 참여기회 확대
* 생활체육 참여율(주 2회 이상, %) : ('10) 36 → ('11) 37 → ('14) 40 이상
- 주요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및 전문체육 훈련여건 개선

⑧ 환경 분야

☐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수질 개선에 지속 투자

- 수질개선 사업을 차질없이 지원하고,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 시설 투자도 확대

* 하수도 보급률(%) : ('10) 90.0 → ('11) 90.5 → ('14) 91.6

- 그동안 집중 확충한 하수관거 및 쓰레기 처리시설 투자는 연차별로 적정수준으로 조정

☐ 기후변화 대응체계 마련 및 녹색생활 국민참여 유도

-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,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 관리제 시행 등 온실가스 감축기반* 마련

*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(BAU : Business As Usual) 대비 30% 감축 목표

- 탄소포인트제*, 그린스타트 운동 등 온실가스 감축 생활화

* 탄소포인트제 적용 가구수(만) : ('10) 116 → ('11) 300 → ('14) 450

☐ 환경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

- 기초·원천 환경기술 개발을 위한 R&D 투자 지속 확대
- 우수 환경기술 사업화 및 환경산업 해외진출 적극 지원

* 환경산업 수출액(조원) : ('10) 4 → ('11) 5 → ('14) 10

☐ 환경 위해요인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

- 아토피, 천식 등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
- 나노 등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, 생활환경 개선대책 지속 추진

⑨ 국방 분야

□ 안보환경 변화에 상응한 전력 증강 및 국방대비태세 확립

- 침투 및 국지도발 등 현존위협에 대비한 전력소요 우선 반영
 - * 초계함 · 호위함 성능개량, 원거리 탐지용 음향센서 등
- 육 · 해 · 공군 합동성을 강화하는 한편, 북한 핵 · 미사일 위협 등에 대비한 감시정찰 · 정밀타격 등 핵심전력 중점 지원
- 국방 R&D 투자 확대, 민 · 군 기술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방위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뒷받침
 - * R&D 투자/국방비(%) : ('10) 6.1 → ('11) 6.5 → ('14) 7%중반 수준

□ 현존전력 극대화 및 장병들의 복무여건 개선

- 수리부속 확충, 정비활동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주요 전투장비 가동률 제고
 - * 주요전투장비 가동률(%) : ('10) 81.8 → ('11) 82.0 → ('14) 83.0
- 군 주거시설 개선사업은 계획대로 '12년까지 완료*하고, 정비고 · 창고 등 일반지원시설에 대한 투자도 확충
 - * 병영생활관 개선(침상형→침대형, %) : ('10) 82 → ('11) 94 → ('12) 100
- 급식 · 피복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, 전역군인에 대한 전직 지원 교육 강화

⑩ 외교·통일 분야

☐ G-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위상 제고

- 對개도국 공적개발원조(ODA)*를 연차적으로 확대

* ODA/GNI 비율(%) : ('10) 0.13 → ('11) 0.14 → ('14) 0.22

- 국제기구 분담금*을 확대하고 UN 국제평화유지활동(PKO) 등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

* 국제기구 분담금(외교부, 조원) : ('10) 0.3 → ('11) 0.4 → ('14) 0.5

- FTA 추진을 확대하고 기후변화·금융협력 등 글로벌 이슈에도 적극 대응

☐ 남북한 정세변화에 대응한 통일대비 역량 강화

-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정착 지원 강화

- 체계적인 북한 정세 분석기반 구축 등 통일정책 수립 인프라 확충 지원

-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을 강화하여 올바른 대북·통일관 정립

☐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남북협력기금 사업은 남북 관계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

⑪ 공공질서·안전 분야

☐ 국민생활 안전 확보 및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지원

- 강도·성폭행 등 강력범죄 예방*을 위해 첨단과학 수사장비 확충

* 강력범죄 검거율(%) : ('10) 88.8 → ('11) 89.0 → ('14) 89.8

- 외국인 불법체류* 방지 및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

* 불법체류자(만명): ('10) 17 → ('11) 16 → ('14) 14

☐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

-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운용하여 종합적 지원시스템 마련
- 범죄피해자지원센터·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상담·의료지원, 법률 구조 등 실질적 지원 강화

☐ 해양주권 강화를 위한 해상 치안·경비능력 강화

- 함정, 항공기 등 해경 장비를 보강하고 해상교통 관제시스템 구축 등 연안 경비·구조 역량 강화

☐ 재해예방 및 안전 활동 지원 강화

- 소하천, 재해취약지구 등에 대한 재해예방사업 지속 투자
- 기상관측 장비 등 재난대비 인프라 확충

⑫ 일반공공행정 분야

☐ 지방교부세 증액에 상응하는 지자체의 역할 및 책임성 강화

- 지자체 신축 청사 건축규모 관리 및 지자체 보조사업 사전 심사절차 이행여부 확인 강화

☐ 재외국민 선거('12.4월)의 차질없는 준비를 뒷받침하고 투표율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

-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정보시스템 등 기본 인프라 확충 지원

☐ 정부 정보망의 연계 강화 및 정보시스템 운용 효율성 제고

- 정부통합전산센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보시스템 운용 및 유지·보수비 절감 도모

- 국가 기록물에 대한 정보화 기반 지속 확충

☐ 세원 양성화, 국제 탈세 방지 등 공평 과세기반 확충 지원

□ **각 부처 요구내용**

○ 각 부처의 '11년 예산·기금 총 요구규모는 **312.9조원**

- '11년 요구 증가율*은 **6.9%**로, 최근 3년 평균수준

* 요구 증가율(총지출기준, %) : ('07) 6.8 → ('08) 8.4 → ('09) 7.4 → ('10) 4.9

구 분	'10예산(A)	'11요구(B)	증감(B-A)	%
○ 총 지 출 (조원)	292.8	312.9	20.1	6.9
▪ 예 산	205.3	219.4	14.1	6.9
▪ 기 금	87.5	93.5	6.0	6.9

○ 특히, 의무지출, 국책과제 및 국방비 등 주요정책 과제에 증액 요구가 집중

□ **'11년 예산안 편성방향**

○ **(편성기조)** 재정건전성 회복 기반을 마련하되, 서민생활 안정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지속

- '09~'13 계획에서 제시된 '11년 재정수지 관리목표* 달성

* 관리대상수지(GDP대비) : ('10) △2.7% → ('11) △2.3% 이내

- 한정된 재원으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재정지출 생산성 제고 노력 강화

○ **(재원배분)**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으로, 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대비 투자 및 서민생활 안정 적극 지원

- R&D, 녹색성장 투자 등을 통해 국가발전을 견인할 신성장 동력 창출

- 일자리 창출 및 서민·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

-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유지 등을 위한 지출 효율화 병행 추진

□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구성 · 운영

- 민간전문가, 정부부처 등이 참여하는 14개 분야별 작업반 구성
 - * 공동반장(민간전문가, 재정부 국장), 간사(재정부 과장), 반원(재정부 및 관련 부처 과장, 민간 전문가) 등 10인 내외로 구성
- 「'10~'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」 수립 지원
 - 중기 재정총량 목표 설정, 분야별 재정투자 방향 등 국가 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분석 등 지원
 - 공개토론 아젠다 선정 · 검토 등 공개토론회 개최 지원

□ 공개토론회 개최

- '10~'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민간전문가 · 여론 주도층의 의견 수렴
 - *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.
 - 6.15~22일중 14개 분야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

구분	6.15(화)	6.16(수)	6.18(금)		6.21(월)	6.22(화)	
	서울	서울	서울	안산	서울	서울	대전
10:00~12:00		교육	민간투자		공공질서 안전	보건·복지	
14:00~16:00	SOC	일자리/ 외교·통일	문화체육 관광	산업중소 기업	환경	총괄 및 총량	R&D
16:30~18:30		농림수산식품			국방		

* 장소 : KDI국제회의실(지방은 대학 강당 활용) ** 국방 및 외교·통일 분야는 비공개

별첨 공개토론회 분야별 주제 발표 주요내용[요약]

① 「총괄·총량 분야」 주제 발표 주요내용〔'10.6.22〕

1. 중기 재정운용방향

☐ 대내외 경제여건 및 전망

- (세계경제) 재정·통화 정책에 대한 국제 공조를 배경으로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 전망
- (국내경제) 수출과 내수가 꾸준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견실한 성장률 기록 전망
- (위험요소) 위기국면 이후의 국제공조의 불확실성, PIIGS 국가들의 재정위기, 잠재성장을 하락 가능성 등 하방위험 존재

☐ 재정여건

- '09~'13계획 수립이후 '09·'10년 경제성장률 전망 상승, 감세조치 유예, '09년 결산결과 재정수지 적자 감소 등 여건 개선
- ⇒ '13~'14년 균형재정 달성에 필요한 '10~'14년 총수입·총지출 증가율 격차가 '09~'13계획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

☐ 중기재정운용 방향

- ① '10~'14년 동안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평균 2.5%p 수준 낮게 유지하는 경우 → '13~'14년 균형재정 달성 가능
 - 다만, 이와 같은 재정총량 목표 달성을 위해 강도높은 세출 구조조정 및 세입기반 확대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
- ② 또한, 국가재정운용계획 운용결과에 대한 사후적인 평가·점검 제도 도입 등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* 구축 필요

* 장기재정전망 보고서 발간, 재정통계 정비 등

□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재정운용방향 : 경제시스템의 효율성 제고

- ① 중소기업 지원 방향을 창업과 벤처 등 신규진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편하는 한편, 적절한 구조조정 지속적으로 추진
- ② 설비투자에 집중된 세제혜택을 완화하는 등 투자관련 세제혜택에 대한 재검토 필요
- ③ 고용친화적 예산제도, 고용촉진 세제지원 등 성장-고용 선순환을 위한 재정운용 필요
- ④ 저출산·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손실 및 연금·보건분야의 재정 부담 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
- ⑤ 수출에 의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 R&D 지원 확대 등을 통한 부품 소재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주력
- ⑥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경제시스템 효율화 과정에서 소외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안정망의 지속적 확충 노력 필요

2. '10~'14년 세입 여건 및 중장기 세제운용 방향

□ 2010~2014년 세입여건

- (세입여건) 금년도 및 내년도 국세수입은 당초 '09~'13계획상의 전망치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나, 2012년 이후의 세입 여건은 불확실성 산재
- (위험요인) 정부가 전제한 5%의 경제성장률이 실현되지 못하고 4%초반에 그칠 경우 당초 세입 목표가 실현될 가능성이 낮으며,
 - 그리스 등 남유럽발 재정위기의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와 금융불안도 잠재적인 위험요인임

□ 세입구조의 특징과 중장기 세제운용 방향

- (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)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
 - 조세부담률이 낮은 것은 개인소득과세와 소비과세에 대한 비중이 낮는데 기인하고, 국민부담률이 낮은 것은 조세부담률이 낮는데다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도 낮기 때문
- (세입구조의 특징) 우리나라는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이 낮으며, 조세지출이 개인소득세 및 법인소득세에 집중
 - ① (개인소득세) 개인소득세 최고 한계세율(35%)은 OECD 국가들 최고 한계세율의 평균(34.9%)과 비슷하나, 개인소득세의 비중은 낮음
 - * 개인소득세 비중(GDP 대비 %) : (한국) 4.0, (OECD 평균) 9.4
 - ② (법인소득세) 법정 법인세율(22%)은 OECD 국가들 평균치(24.2%)를 하회하나, 법인소득세 세수는 OECD 국가 평균과 비슷
 - * 법인소득세 비중(GDP 대비 %) : (한국) 4.2, (OECD 평균) 3.9
 - ③ (소비세) 부가가치세 세율이 낮아 소비세수의 비중이 낮은 편
 - * 부가가치세율(%) : (한국) 10.0, (OECD 평균) 17.6
 - * 소비세 비중(GDP 대비 %) : (한국) 8.4, (OECD 평균) 10.9

□ 정책제안

- '10년, '11년 세입은 당초 전망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이나 2012년 이후에는 정부가 전망한 5% 성장률의 실현여부가 중요
- 개인소득세(조세지출 축소), 부가가치세(세율인상) 중심의 중장기적인 세입확충 방안 고려 필요
- FTA 등에 따른 관세세수 감소에 대한 대비 필요
-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세입정책 운용 필요

② R&D 분야 주제 발표 주요내용 ('10.6.22)

1. 글로벌 R&D 활성화 방안

- 그동안 국내중심의 폐쇄형 R&D에서 국내외 R&D 자원의 연계 활용을 중시하는 글로벌 차원으로 R&D투자가 발전할 필요

* 글로벌 R&D : 기술혁신을 위해 특정 국가의 국내 과학기술자원만을 사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경의 범주를 넘어 전세계에 걸쳐 과학기술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R&D 활동

- R&D 분야의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4가지 방안을 제시

① (관점의 전환) 단순한 국제협력 → 글로벌 R&D

- 과학기술 국제교류, 협력의 좁은 범주에서 벗어나 과학기술 자체를 글로벌화 하는 넓은 범주로 과감하게 인식대상 확대

② (전략의 변화) 일방향 → 허브형전략으로 발전

- 해외자원의 국내유입에만 중점을 두는 '일방향 전략'에서 탈피 국내외 자원간 네트워크와 국내자원의 해외 진출을 함께 모색하는 '허브형 전략'으로 전환

③ (범위의 확대) 받는 R&D → 상생과 나눔의 R&D

- 국내 기술혁신과 과학기술 글로벌화를 확산하고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을 아우르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

④ (인프라의 강화) 글로벌 친화적 인프라의 정비와 확충을 통해 과학기술자원의 글로벌 흐름을 촉진

- 국제 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관련규정 마련, 인력 양성 및 통계인프라 확충등

2. 국가 R&D 사업관리제도 개선 (R&D 통합관리시스템 개선)

- 연구개발 투자 증대가 국가과학기술력 강화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R&D 예산관리체제 구축 필요
 - 정보 미관리로 인한 연구정보의 누수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사중복을 배제하는 등 관리 효율성 제고
- 국가 R&D 사업의 진행상황을 한눈에 파악하여 R&D 정보효율 및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3가지 시스템 혁신방안 마련
 - ① (국가R&D정보 실시간 수집을 제고) 연구협약시점 과제 정보에 대한 실시간 수집을 제고, 정보시차의 문제점 최소화
 - * 현재 과제협약시점부터 R&D 정보를 상시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으나 실시간 수집율은 60%대에 불과
 - 협약시점즉시등록 의무화 및 목표관리기준을 도입하여 과제 정보에 대한 실시간 수집을 제고
 - ② (최종연구자에 대한 과제정보 관리) 조사분석체계상 과제관리 범위를 현행 주관연구과제에서 위탁/협동연구과제로 확대
 - 협동과제의 경우 주관·참여·위탁으로 구분하여 위탁과제까지 관리하여 연구책임자의 참여인력 및 연구비 정보까지 관리
 - ③ (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) 연구비 상세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최종연구수행 주체별로 연구비 세부항목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
 - 연구비 정보를 최종수행 주체별로 인건비, 직접비, 간접비 등 세부 항목으로 구분·관리

③ 「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 분야」 주제발표 주요내용('10.6.18)

1. 분야별 자원배분 방향

- (산업·무역 분야) 글로벌 위기 이후 산업재편 과정에서의 우위 확보와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국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적 투자 필요
 - 최근 부상하고 있는 녹색산업과 융합신산업에 대한 중점 지원으로 위기 이후 재도약 여건 조성
 - 핵심 부품소재 자립화로 대외의존도를 개선하고, 원전·방위산업 등 새롭게 수출잠재력이 확인된 분야 지원 확대로 신흥시장 공략 강화
 - 부지매입비보다는 시설투자·고용창출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역투자 촉진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,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
- (중소기업 분야) 불특정 다수에 대한 균분지원(양적 성장 중시)이 아닌 '선택과 집중'(질적 성장 중시)을 통해 전반적인 정책성과 제고 필요
 - '혁신선도 중소기업'을 집중 육성하고, 이들의 혁신모델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산시키는 전략이 효과적
 - 단순 창업률 제고를 넘어 창업 성공률 및 파급효과 확대로 고용창출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사후 관리 기능을 강화
 - 인력정책도 단순 기능인력의 수급불일치 해소에서 기존 인력의 고도화 및 고급인력 유입 여건 개선에 주력
 - 소상공인 지원은 대상의 방대함으로 인해 하드웨어 지원 보다는 교육·정보제공·컨설팅·네트워크화 등 연성지원 시책이 효과적

- (에너지 분야) 안정적인 공급 위주에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기반 조성 필요
 - 에너지이용 합리화는 에너지목표관리제 도입을 계기로 재정 지원보다는 관리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이행
 - 공급 중심의 유틸리티 시스템, 원가보다 낮은 에너지 가격 등은 향후 개선
 - 신재생에너지보급은 원별 잠재력·경제적 전망 등을 감안, 전략적 사업에 지원을 집중하여 차세대 핵심원천기술 획득을 뒷받침

2.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체계 개선방안

- (지원 대상) 향후 정책금융은 시장금융이 대출에 소극적인 창업 초기기업 및 중장기 시설자금에 대한 지원에 더욱 역점을 둘 필요
- (지원 금리) 시장금리에 비해 크게 낮은 정책자금의 지원금리는 향후 정책자금의 수급균형을 뒷받침하는 가격기능 강조 필요
 - * 정책자금(중기청) 금리 수준 : 공자기금 대출금리 - (0.33~0.7%p)
- 지나친 저금리는 정책자금에 대한 만성적인 가수요 유발과 시장금융 활용이 가능한 기업군의 정책자금 수요 편입 유인 제공
- (지원 규모) 정책금융의 적정 지원규모 추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, 명확한 운용기조 확립과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지원규모를 일정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

④ 「SOC 분야」 주제발표 주요내용('10.6.15)

1. SOC 투자의 적정성

- ☐ 그간 도로 중심의 교통투자로 인해, 정시성과 대량수송의 장점이 있는 철도 등 녹색교통시설이 부족한 상황
 - 도로 수송 부담률이 여객 95%, 화물 96%에 이르는 등 인적·물적 자원의 이동은 자동차에 절대적으로 의존
 - 우리나라의 녹색교통경쟁력은 조사대상 23개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인 22위 수준
- ☐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 도로에서 철도 중심으로 교통투자의 정책방향을 전환할 필요
 - 녹색교통수단인 철도에 우선 투자하고, 스톡이 상당수준 축적되어 있는 도로는 투자규모를 조정
 - 도로와 철도간 통합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철도는 중·장거리(200~400km), 도로는 단거리(100~200km) 통행을 담당함으로써 수송효율성 제고

2. 도로 및 철도 투자효율화 방향

- ☐ 도로투자는 신규건설보다 기존도로 개량을 통한 교통애로 해소에 중점
 - 투자타당성 검증제도(예비타당성조사, 총사업비관리 등)를 적극 활용하여 엄격한 사업관리 필요
- ☐ 철도투자는 적정스톡 축적시까지 교통SOC내에서 철도 투자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철도수요 확충* 및 운영 효율화 등 병행 필요
 - * 역세권 활성화, 열차운영 효율화 및 연계교통체계 개선 등
 - 철도투자 확대는 철도 수요증대와 철도 이용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
 - 신규 철도투자는 투자소요가 크고 투자비 회수기간이 길다는 점을 감안하여 결정

⑤ 「농림수산식품 분야」 주제발표 주요내용('10.6.16)

1.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운용 방향

- 농어업·농어촌에 대한 정책목표*는 계속 변화하고 있으나, 과거정책의 계속된 추진으로 일부 재정지원의 비효율 측면 존재
 - * 농어업구조개선(김영삼 정부) → 농어가 경영안정(김대중 정부) → 농어민 복지와 지역개발(노무현 정부) → 농어업의 신성장 산업화(현 정부)
- '작지만 강한 농어업 육성' 등을 위해 미래 성장 잠재력을 축적하고 투자효율성을 높이는 농어업 구조개선 정책 필요
- 농업농촌을 경쟁력을 갖춘 미래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 필요
 - 농식품 모태펀드, 농업 R&D, 농지 유통화 등 시장참여 활성화
 - 농산물·식품 수출, FTA 등 농업의 세계화에 적극 대처
 - 농지연금·농촌개발 등 고령 사회에 대비 농어민(촌) 복지 강화
- 경제성있는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의 효율적 보전·활용
 - 숲가꾸기·조림 등을 통한 경제림 육성, 산림바이오매스 활용·수목원 조성 등을 통한 산림 자원의 효율적 활용
- 수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수산자원 관리 강화
 - 맞춤형 연안어업 관리, 어장환경 개선, 친환경 양식기반 구축 등 수산자원 관리 고도화
- 농어업과 식품산업 연계 강화를 통한 고부가 식품산업 육성
 - 먹거리 안전성 강화 등 국가식품시스템 관리 고도화 및 식품산업 국제화를 위한 식품산업 인프라 육성

2. 직불제 개편 방향

☐ 농가소득 지속감소, 식량자급률 하락, 쌀 과잉공급, 국토·환경 보전 등 다원적 기능 확산 등에 대비 직불제를 개편할 필요

☐ 개편방향

○ 직불제를 목적에 따라 공익형과 경영안정형으로 유형화*

* 쌀 고정직불, 친환경 직불, 경관 직불, 조건불리 직불 등 → 공익형 직불

* 쌀 변동직불, FTA 피해보상 직불 등 → 경영안정형 직불

○ 경영리스크가 큰 일정규모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도입

⑥ 「보건·복지 분야」 주제발표 주요내용('10.6.21)

1.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구축 방안

□ 향후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인구 부양비 등 복지지출 급증이 예상되므로 중장기적인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중요

- '09년 조세연구원 추계모형에 따르면, 우리나라 GDP 대비 복지지출(공공사회복지지출)은 '10년 8.9%에서 '50년 최소 20.8~24.7% 수준으로 증가

* OECD 평균 공공사회복지지출 : 20.6% ('05년 기준)

- 이러한 복지재정의 급속한 증가는 국가채무 증가 등 재정여건 악화, 경제·교육 등 여타 분야 지출축소 불가피 등 문제 발생

□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구축을 위한 지출 효율화 방안

- (총량관리)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지출 수준 유지를 위해 30~50년간 장기 복지재정 전망 등을 통한 총량 관리체계 강화

- 장기 전망을 토대로 지원방향 및 재원조달 방안을 연계 수립·공론화하는 체계 마련

- (부문간 우선순위 조정) 생산가능인구 증가를 위해 노인 부문 보다는 보육 부문을 중점 투자

- (공적연금) 재정재계산 제도를 통한 재정상황 점검 및 '低부담-高급여' 구조 개선 노력 지속

- (건강보험)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및 수입 확충으로 구조적 재정적자 발생에 적극 대응

- 보장성 확대는 건강보험 재정상황과 연계 추진하고, 건강보험 지출의 복지재정 포함(건강보험 정부기금화) 등 재정통제 강화

2. 기초생활보장제도 탈수급 촉진 방안

□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의 소득보장과 관련해서 큰 진전을 이루었으나 탈수급 부진 문제 노정

* '08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탈수급율은 5% 미만으로 추정되며, 대부분 근로능력 향상을 통한 취·창업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탈수급에 해당

○ 기초생활보장제도 외에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 제도로 인한 급여과잉으로 탈수급 유인 저해

○ 근로능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연계가 취약하여 실질적인 근로 연계 복지제도 미흡

□ 탈수급 촉진을 위한 개선 방안

○ Positive Approach

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탈수급한 후에도 일정기간 의료·교육 급여를 지급하여 가계지출을 보전할 필요
- 근로빈곤층의 직업훈련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 프로그램과 복지 프로그램의 통합 운영

○ Negative Approach

-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수급기간 제한 및 급여수준 하향 조정, 근로능력 판별 및 소득심사 기능 등 수급자격 관리 체계 강화

⑦ 「일자리 분야」 주제발표 주요내용('10.6.16)

1.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화 방안

☐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

- 여성, 청년, 중·고령자, 자영업 등 계층별로 특화된 사업 개발
- 훈련프로그램, 고용지원서비스, 고용장려금 등을 유기적 연계
- 유사·중복 사업의 검토, 사업재조정 등을 위한 총괄적 조정 기능 및 평가체제를 강화

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부 핵심과제

- 구직·구인난이 동시에 존재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고용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, 직업상담사 등 전문인력 양성 추진
-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능력 제고를 위해 생산성 향상, 근로 형태 다양화, 중소기업 작업장 혁신 지원 강화
- 여성 경력단절 방지, 고령자 고용안정 등을 위한 단시간 근로 활성화
-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,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한 자영업자 대책 마련 필요

2.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발전 방향

☐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개선 과제

-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비중을 줄이고, 간접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

- 인건비 전체에 대한 지원보다는 사회보험 가입 유도 등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
- 인건비 지원 종료 후 급격한 고용조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차별 인건비 지원비율을 하향 조정할 필요
- 인건비 지원 종료 후에는 금융지원 수단 등과의 연계를 강화

3. 고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향

□ 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고용서비스 활성화가 중요

- 그러나, 우리나라 고용서비스 산업은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 모두 전문성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부족
-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 일반적 실직자에 대한 기본적 고용서비스 제공은 공공부문이,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차별화된 고용서비스는 공공부문과의 성과급 계약체계를 통해 민간부문이 수행

□ 고용서비스 시장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 과제

- 요금제 등 고용서비스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법규제 개선
- 공공부문에서 고용서비스를 이용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기획하고,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추진
- '우수고용서비스기관 인증제' 등을 통해 선도기업을 육성하고,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

⑧ 「교육 분야」 주제발표 주요내용('10.6.16)

1.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구조조정 방안

□ 학생수 감소 추이, 대학교육과 사회수요간 미스매치, 대학의 낮은 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대학 구조조정 추진 필요

- '15년부터 대입정원이 고교 졸업생을 초과하여 입학자원 감소에 따른 부실대학 증가 및 교육의 질 하락 등 사회문제 초래

* 초과 대입정원(추정) : ('10) $\Delta 32 \rightarrow$ ('15) 0.4 $\rightarrow$ ('16) 24 $\rightarrow$ ('20) 127 $\rightarrow$ ('24) 209천명

- 대학의 배출 인력이 산업계 수요와 숙련수준을 반영하는 데 미흡
- '10년 한국의 교육경쟁력 순위(IMD 발표)는 58개국 중 35위 수준

□ 대학 구조조정 추진 원칙

- 수요자(학생, 산업계, 전문가, 동문 등) 요구 반영
- 시장친화적 구조조정(자체평가, 외부평가, 정보공시 등)
- 불법적 대학 운영에 대해서는 폐교·통폐합 등 강력한 제재
- 대학설립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여 대학의 과잉공급 지양

□ 대학 구조조정 방안

- 대학정보 공시 내실화 및 대학 평가·인증 강화
- 교육여건과 구조조정 실적을 정부의 행·재정 지원과 연계
 - * 부실대학에 대한 학자금 대출 및 재정지원사업 제한 등 추진
- 경영컨설팅, 잔여재산을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 허용 등 다양한 퇴출경로 마련
-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대학간 M&A 활성화, 사립대학 이사장과 총장의 재산공개, 대학설립 허가주의로의 전환 등 제도 정비
- 실질적인 교수 연봉의 차이를 인정하는 보수 시스템 도입, 대학총장 직선제 개선 검토 등

2.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

- (필요성)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, 지방교육재정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의 세입구조 개선 및 세출운용 효율화를 통한 초중등교육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 증가
 - 세입측면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의 일정률(현재 20.27%)로 고정되어 있어서 안정적 지방교육재정 확보가 곤란하고, 특별교부금(10년 1조 1,103억원)은 집행 투명성이 부족
 - 세출측면에서 그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지방교육재정이 인건비, 시설비, 교육복지에 지출이 집중되고 있어 구조조정 필요
- (세입 구조 효율화)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구조 개편, 특별교부금의 운용 개선 등을 추진할 필요
 - 지방교육재정교부금관련 ① 만3~5세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 방안,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전년대비 일정률로 증가시키는 방안 등 추진
 - 특별교부금관련 ①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② 시책사업 심의회에 과반 수 이상의 외부인 참여 등 제도개선 추진
- (세출 운용 개선) 교원직급 등 인력구조 개편, 학교규모 적정화 등을 통한 세출 효율화 도모
 - 교무인력은 ① 교원 증원보다는 교무지원인력 확대, ② 재원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교단교사 직급 다양화 등 추진
 - 학교시설은 ① 전교생 100명이하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·재배치, ② 규모의 경제실현을 위해 '학교 안전·시설공단' 설립 추진
- (지방교육자치 개선) 단기적으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, 중장기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필요
 - 단기적으로 ① 지방교육청(180개)을 저비용·고효율 조직으로 자율적 통합을 유도하고, ② 지자체 전입금에 대한 지자체 단체장과 교육감간 협의 내실화 도모

⑨ 「문화·체육·관광 분야」 주제발표 주요내용(‘10.6.18)

□ 국제경기대회 개최 의의

- 우리나라 국제스포츠 위상 및 국가브랜드 제고, 관광유입 등 경제적 파급효과, 국민통합 기회제공 등 사회문화적 가치 제공

□ 최근 현황 및 문제점

- (현황) 우리나라 국제 스포츠 위상 강화에 따라 대형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 급증 추세
- (문제점) 지자체의 경쟁적 국제경기대회 유치가 국가재정의 낭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
- ⇒ 유치단계에서부터 개최·사후관리 전과정에 걸쳐 국민경제적 효과를 최대화하는 유치 전략 필요

□ 국제경기대회의 경제적 개최·운영을 위한 현안과제

- ① (경제성 있는 경기대회의 선별) 한정된 자원여건을 감안, 경제성 판단 및 우선순위에 따른 선별적 유치 필요

* 경제성 :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회후생 효과 등

- 유치가능성을 포함한 유치전략단계에서부터 평가지표 발굴 및 측정 방법론·성과평가 체계화

- ② (경기대회 유치·개최비용 최소화) 개최비용* 측면에서 효율적 개최지 선정, 전국 경기시설 배치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

* 국내외 관광객 유치가능성, 기존시설 활용 가능성, 신규 건립시설의 사후 활용 가능성, 민자유치 가능성 등

- ③ (국제경기대회 승인절차 개선) 현행 국제경기대회심의위원회의 사전 승인절차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부족

□ 개선방안 논의

① 국제경기대회 승인절차 개선

- 심사 평가기준의 정량화 → 객관성 · 일관성 담보
- 심사기준의 '경제성 판단 지표' 강화(수익성, 시설투자소요 등)
- 적정 국제경기대회 유치 주기의 설정 가능성 검토

② 전국 체육시설 배치계획 수립

- 전국 시설계획 수립 → 개최 지역의 적정성 판단

* 전국권역별 시설현황 파악 및 적정 체육시설 수 · 규모에 대한 계획 수립

⇒ 중복투자 방지, 경기장 시설공유 및 사후활용도 제고,
건립비용 등 국고지원 규모의 적정성 판단기준 등

⑩ 「환경 분야」 주제발표 주요내용('10.6.21)

1. 환경분야 중장기 재정투자방향

- ☐ 과거 상·하수도, 수질에 편중된 지원에서 벗어나 자연·폐기물·대기 부문 등으로 투자 다각화 필요
 - 유사사업 통폐합, 환경기초시설 광역화 등을 통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되,
 - 기후변화, 환경보건 등 새로운 환경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도 병행 추진 필요
- ☐ 지역간 환경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적극 유도
 - 낙후지역 상수관망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상수도 통합 운영 등을 통해 투자효율성을 제고
 - 폐기물 자원화, 녹색 R&D, 기후변화 대응 등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적극 뒷받침

2.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분야 정책과제

- ☐ 현재까지 재정투자가 대부분 온실가스 감축 예산인 점을 감안시 기후변화 적응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필요
 - 특히 선진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정책방향 마련
- ☐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관리·검증이 선행되어야 하며,
 - 향후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, 전문인력 양성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

⑪ 「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」 주제발표 주요내용('10.6.21)

1. 범죄 대응능력 향상방안

□ 최근에 성폭행 등 흉악범죄로 부터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 국가의 기본책무라고 봄.

○ 범죄억제정책을 담당하는 여러 부처들이 적절한 정책 공조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정책의 효과성 약화 우려

* CCTV의 경우 경찰청, 복지부, 행안부의 공조 필요

○ 범죄발생시 피해 당사자 외에 사회전체에 끼치는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범죄발생 증가원인을 파악하고 대책 강구 필요

□ 범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치안의 과학화와 첨단화가 필수적

○ 치안 과학화 및 첨단화를 위한 하드웨어 인프라 및 과학수사 기반 등의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활용 필요

2. 범죄피해자 보호제도

□ 범죄피해자구조금은 지원금 성격, 타 지원계층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수준으로 산정

○ 범죄피해자 지원은 국가배상이 아닌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, 구조금 단가도 신중한 검토후 조정

○ 범죄피해자 이외에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여타 지원대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여 지원함이 타당

* 지원대상 : 유족·장해자에서 유족·장해·중상해자까지 확대('10.8.15부터)

⑫ 「민간투자분야」 주제발표 주요내용('10.6.18)

- 기존의 수익형(BTO)과 임대형(BTL) 사업방식 이외의 새로운 민자사업 추진방식 도입 필요
 - 수익형(BTO)과 임대형(BTL)의 혼합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투자 위험 및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
 - * (예시) 경전철 사업의 토목분야(터널, 노반 등)은 BTL방식으로, 건축분야(전기, 신호, 통신, 건축 등)는 BTO 방식으로 추진
 - BTL분야의 정부지급금을 실제 수요 및 운영효율과 연계하여 지급하는 방안 검토
- 부대사업 활성화로 본사업의 수익성을 보완하고, 저렴한 비용의 자금조달을 위해 SOC채권 발행을 촉진
 - * 최근 “제2차 민자사업 활성화방안”의 후속조치로 부대사업 및 SOC 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개정안을 국회제출
 - 부대사업 사례 적극 발굴, 본사업과 부대사업의 리스크 분리, 부대사업 이익정산 방법 개선 필요
 - * 현재는 부대사업 이익을 사전에 확정하여 주무관청이 회수(본사업의 이용료, 건설보조금 인하에 활용)하고, 초과이익은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공유
 - SOC채권에 대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확대, 자금재조달* 이익공유 완화 검토
 - * 자금재조달(refinancing) : 사업시행자가 자본구조, 출자자 지분 및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여 출자자의 기대이익을 증가시키는 경우 주무관청과 출자자가 기대이익 증가분을 50:50으로 공유하는 제도